

# 한-아세안(ASEAN) FTA 추진 동향과 문제점



“늦게 출발한 만큼 짧은 기간에 많은 나라와 FTA를 맺겠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위의 말처럼 정부는 올해 27개국과 동시다발적 FTA(자유 무역협정)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2007년까지 50여개국과 협상을 추진하여 최소 15개국과 FTA를 발효한다는 계획 아래 무차별적인 FTA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FTA는 한-칠레 FTA를 겪으면서  
 봐왔듯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미  
 지수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까지 칠레와의 FTA  
 를 비롯해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과 정  
 부간 협상을 체결하고 국회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  
 다. 실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협상체결이었다.

또한 현재에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캐나다  
 와의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중국·인도·멕시코  
 ·Mercosur(남미공동시장)·한-중-일 간 FTA  
 를 위한 공동연구 단계이거나 예비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FTA는 모두 농산물수입국인 우리나라 농업  
 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버거운 협상들이며,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진  
 행 중인 FTA 중 가장 쟁점이 될 것은 바로 아세안과  
 의 FTA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세안과의 FTA로 쌀을 제  
 외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고 가정할 때 농업분야  
 국내 생산감소액은 연간 1,175억~1,290억원에 달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채소·과실·견과류  
 는 860억~910억원, 소·돼지·닭은 190억~220억  
 원, 쌀을 제외한 곡물 50억~80억원, 임업 60억~70  
 억원, 유지·섬유 등 기타작물 10억~15억원의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이번호에서는 당장 대응이 시급한 한-아세안FTA

가 그간 진행된 동향을 살펴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  
 는 정책과 방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꼬집었다.

## 1. 협상 추진 경과

- 2004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2005년부터  
 FTA 협상을 개시하여 2년내에 타결기로 합의  
 (2005년까지 상품분야, 2006년까지 서비스·투  
 자분야 타결)
- 2005년 7월 18~20일 4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으  
 며, 협상에서 8월 중 관세인하 요청 품목의 목록  
 (Request list)을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인 상품양  
 허 협상을 진행하기로 함

## 2. 주요쟁점별 양측 입장

- 우리측은 전체 93~95% 품목(농산물, 비농산물  
 포함)의 관세를 2012년까지 철폐(자유화 또는  
 개방)할 것을 제안
- 아세안측은 2009년 까지 전체 80% 품목(농산물,  
 비농산물 포함)의 관세를 철폐할 것을 주장했으  
 며, 이것이 애초 양측 정상들의 합의사항임을 강  
 조하면서 2010년 이후 관세철폐 품목의 비율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함. 특히, 자유화수준은  
 80%까지 유지하는 대신 양허제외는 반대함

## 3. 향후 정부 추진방향의 문제점

정부는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  
 월 29일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93%냐 95%냐, 아니면 그 이상이냐?’의 양허(개방)수준과 아세안의 요구를 받아 들여 ‘제외품목을 둘지, 아니면 제외품목 수준을 얼마만큼 할지’ 구체적인 대응 입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외교통상부와 산자부는 ‘가능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실지 협상테이블에서 협상 대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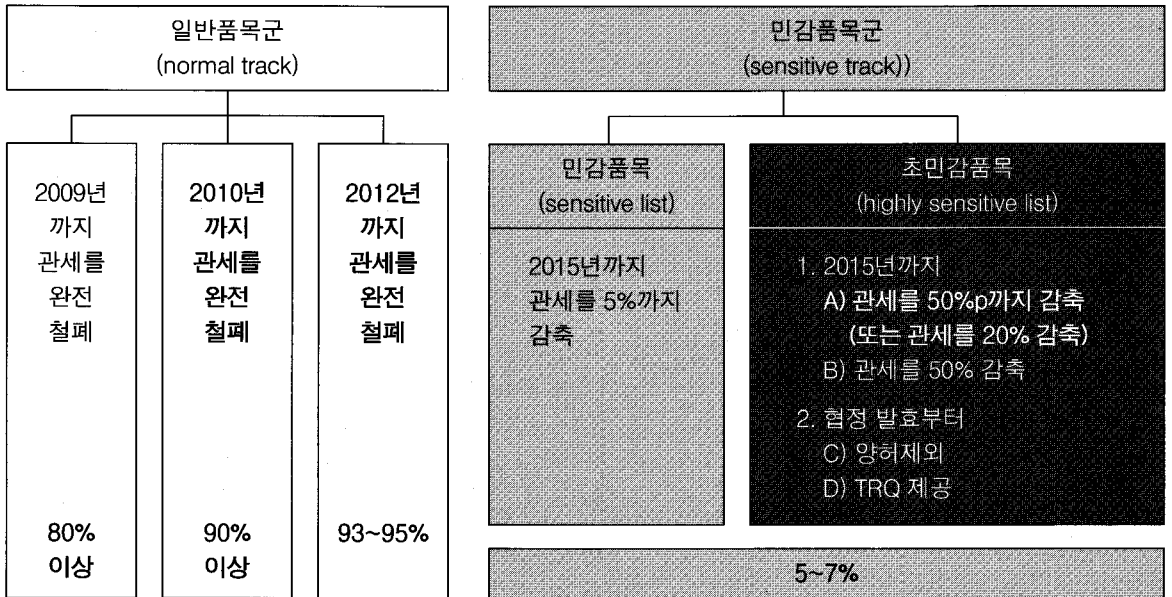
‘최소한의 민감품목만 두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측이 양허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아세안 자국의 관심품목인 열대과일과 축산물의 높은 관세 감축 수준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우리가 최소한 막아야 되는, 식량안보와 직결된 초민감한 품목들도 내어주어야 하는 농업위기의 상황에 봉착할

〈한-아세안 양국의 주요쟁점별 입장〉

구분	한국	아세안
관세철폐율	93~95%(농산물, 비농산물)	80%(농산물, 비농산물)
철폐기한	2012년까지	2009년까지
제외품목여부	초민감품목은 인정해야 함	제외품목은 없어야 함

〈한국측이 제시한 상품양허방식(modality)〉



수밖에 없다.

외통부와 산자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농업분야를 대표하고 있는 농림부는 만약 관세철폐 비율이 95%가 되면 나머지 민감품목이 5%가 남게 되는데, 그 5%안에 최대한 많은 수의 농산물을 포함시키겠다는 소극적인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민감품목 수와 초민감품목의 수, 품목의 종류에 대해서는 분석중이라고 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욱 의문인 것은 농산물의 민감품목군을 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농산물의 민감품목군을 정하는데 있어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외교부와 산자부가 '수입실적이 미미한 품목은 관심품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있다. 그런데 실제 수입실적이 없는 품목의 경우라도 그것이 민감하지 않아서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검역강화 등 이른바 비교역장벽을 통해 적절히 막고 있는 까닭에 실적이 없는 품목이 많다.

이미 외통부와 산자부에는 반농업적인 기조가 뿌리깊이 박혀 있기에 농업파탄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것인데, 앞으로 농림부가 어떻게 외교부와 산자부를 설득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다.

#### [ 용어해설 ]

•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노르웨이 · 스위스 · 리히텐슈타인 · 아이슬란드 등 EU(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4개국이 회원국들간에 공산품 교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

#### 4. 한농연의 요구와 대응방향

우리 농업과 농촌의 크나큰 피해를 가져올 FTA, 특히 아세안과의 FTA 체결을 논의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첫째, FTA를 통해 공산품 수출확대를 모색하기 이전에 효율적인 산업간 균형성장 방안과 FTA체결 시 피해를 입는 산업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 소득재분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FTA 추진에 있어 여전히 농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반영할 수 있는 내부협상 시스템조차 마련하려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①사전영향분석 ②대상국선정 ③국내대책마련 ④협상진행 등에 대한 농민대표의 참여가 철저히 보장되고, 진행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내 식량자급률 상황을 고려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농업품목들은 민감품목으로 선정하여 관세철폐를 예외로 해야 한다. 특히 아세안과의 FTA는 과수분야와 축산분야의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이므로 반드시 높은 관세감축은 막아내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요구와 촉구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당연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세안 FTA 또한 강력하게 저지시켜야 할 것이다.

• Mercosur: '남미공동시장'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우루과이 · 파라과이 4개국에 의해 1995년 1월에 발족한 EU형의 공동시장. 현재는 볼리비아와 칠레까지 6개국임